데스크시각

김 동 영

국민 속이는 선거 '그만'

선거는 거짓말의 예술이라 했던가. 선거철에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쉬는 숨결 말고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다소 과장된 말도 있다.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된다는 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이라고 했으니 우리의 정치판이 오죽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북악산 산행을 하면서 "선거라는 게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비실비실 웃으면서 나가서 시비하고, 선수들끼리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선거공약

노 대통령의 속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선거를 신성한 권리의 행사라고 여겨온 유권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요모조모 살펴가며 가장 적당한 후보를 선택해온 국민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을 속이는 게임에 익숙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선거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선거가 다가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앞장서왔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5·31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는 이번 선거를 내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온갖 교언(巧言)과 영색(令色)을 동원하며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 기만행위는 정치권이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는 공약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야가 광주와 전남에서 꺼낸 공약은 굵직하고 거창하다. 열린우리당은 ▲2012년 여수엑스포 지원 국회특위 조속 가동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2010년까지 전라선 KTX 개통 ▲광양항 조기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나라당도 ▲여수엑스포 유치 ▲호남고속철 2015년내 조기 완공 ▲광주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 ▲광양만권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약 보따리는 더욱 커지고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재탕, 삼탕의 지역 숙원사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예산이나 추진일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광주와 전남의 공약은 따지고 보면 '공약(空約)'이나 다름 없다.

여수엑스포 유치는 정부 차원에서 다짐했지만 유치활동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민간유치위원회마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광주문화중심도시는 노 대통령이 '문화수도' 운운하며 약속했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광양항 개발은 '양항 정책'이란 정부의 당초 의지마저 실종됐지 않은가.

호남고속철은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호남고속철 건설은 참여정부까지 4개 정부에 걸친 공약이지만 지난 18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만 몇 차례 실시됐을 뿐 착공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을 공약한 정부가 손을 놓고 '먼산'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정치권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까지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선심 쓰듯 발표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려되는 선거 후유증

열린우리당은 호남고속철에 대한 구체적 착공시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대전·충남과 전북에서 공주역과 정읍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차역을 마구잡이로 늘리면 호남고속철은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자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헛배만 부르게 하는 공약이 춤을 추면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오죽하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방선거 뒤 경제부담 가중과 부동산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후유증을 거론하고 나왔을까.

교언이나 영색에 휘둘릴 국민은 거의 없다. 아무리 선거가 국민을 속이는 게임이라지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 분노한 국민들이 자신들을 다시 속이려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겠는가.

〈편집부국장〉 dy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 행 순

여성과학기술인센터 광주·전남 유치해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 06791호)이 2002년 제정되고, 2005년 3월에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개원되었다.

전국센터의 역할은 교육개발 및 지원, 경력관리 및 정보운영,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네트워크 지원 및 홍보의 네 개 영역을 통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강화로 활용 극대화를 이루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건설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며칠 전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2개를 신규지정하기 위한 과기부 공고가 났다.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학술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대단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 여년간 전남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단히 우수한 여학생들이 이곳 호남의 지방대학들에 집중되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짐작컨대, 똑똑한 아들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서울로 보내지만, 똑똑한 딸들은 지역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것 또한 목격하였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 연구소, 산업체와 기업체가 부족하여 이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지역적 약점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역센터를 기필코 광주·전남권에 유치하여 인재육성의 기회로 삼고 이들이 자기분야에서 전공을 살려 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훈련을 시키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주와 전남권에 있는 대학들이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지역센터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대응투자를 하며 연구소, 센터 등의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와 광주시가 적극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센터 유치는 수년간 확보되는 사업지원금을 바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높은 차원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센터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의 간격을 줄이는 역할을 감당하여 과학기술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풀을 양성할 것과 전공지식이 활용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방대학출신 여성이라는 부정적 자기제한에서 벗어나며, 아직도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의 능력발휘를 제한하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포기하고 좌절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회장(전남대 약대 교수) 2005년10월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 입니다.

기 고

김 명 석

'녹화의 기적'을 '육림의 기적'으로

4월에는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 '청명'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설·단오·추석과 함께 4대명절에 속했다.

우리 조상들은 청명 15일 동안을 5일씩 구분하여 첫 번째 5일은 오동나무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두 번째 5일은 들쥐 대신 종달새가 나타나며, 세 번째 5일은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청명 당일은 날이 풀리고 화창해 일년 중 식목이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일반인들은 자녀가 시집·장가 갈 때 장롱을 만들어 줄 재목감으로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식목일에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국가의 100년 대계다.

아울러 현재 목재 소비량의 91.2%(2005년 산림청 통계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식목이 '부국'의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유엔은 한국을 이스라엘과 함께 20세기의 대표적 녹화 사업 성공 국가로 꼽았으며, 2002년 '세계 산의 해'에는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 자부심을 전세계에 알렸다. 이제는 '녹화의 기적'을 '육림의 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 임업강국의 꿈을 키워야 할 때다.

중국의 WTO가입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값싼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현실에서 기존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이러한 파고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아직 어린 나무가 자라는 산림공간과 방치된 산간계곡의 휴경지를 이용해 산양삼·두릅·더덕·도라지·고사리·취나물 등 무공해 임산물을 생산, 고급 건강식품으로 판매한다면 농·산촌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2001년부터 단기소득화가 가능한 민두릅의 근삽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지구엽초·석창포·헛개나무 등의 단기임산 산약용 자원의 재배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음나무·화살나무를 이용한 소득화 방안 연구는 물론 황칠나무 등의 재배 및 수액채취 성분분석 등의 연구도 하고 있다.

표고버섯은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우량균주 선발 적응시험 및 톱밥봉지 재배와 기술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고, 밤나무혹벌 천적인 중국긴꼬리좀벌의 사육 방사 등 생물적 방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경남·북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 및 방제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농촌 주민의 소득 공간을 조성하고,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파고를 헤쳐나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전라남도산림환경연구소〉

청원경찰은 고객 도우미가 아니다

은행에 일을 보러 갈때마다 정문에 '무장경관 배치 근무중'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를 하기 위해 최소 1명 이상의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청원경찰들은 본래의 임무보다 고객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들도 현금자동화 기기 사용법이나 공과금 접수 등의 안내 서비스를 청원 경찰에게 요구하고 있고, 은행측에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청원 경찰들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은행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각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끔 청원 경찰들이 은행 주변 순찰 근무를 하지 못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에 노출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청원 경찰이 고객 도우미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고객들도 청원경찰에게 안내 서비스를 요구할 게 아니라 은행 직원에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용동

일회용 라이터 방치하면 위험천만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판촉물중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 라이터다. 가격이 저렴한데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상당수 흡연가들의 집에는 일회용 라이터가 쌓여 있고 도로에서는 버려진 라이터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일회용 라이터를 방치하면서 자칫 어린이들의 불장난 도구로 사용될 우려도 높고, 여름철 승용차 안에 무심코 놓아둔 라이터는 폭발 사고의 위험도 많다.

일회용 라이터는 밀폐된 차량안의 온도가 섭씨 75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실 및 소방파출소·경찰지구대·동사무소 등에 일회용 라이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면 어떨까.

자원 낭비를 막고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김창환·광주시 북구 일곡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사 설

임업 경쟁력 높일 育林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치산정책은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6·25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국토가 오늘날 울울창창(鬱鬱蒼蒼)한 산림으로 변모한 것은 60년대 이래 일관되게 추진돼온 육림정책의 성과다. 1967년 산림청이 발족한 이후 1973년부터 본격화한 치산녹화 사업은 그동안 407만 ha에 100억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눈부신 성과를 냈다. 한국의 산림은 그 자체로만 3조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며, 수질과 대기정화기능·수방효과등 공익가치를 환산하면 무려 59조원의 가치를 갖는 든든한 재산이 됐다.

그러나 이젠 우리의 육림정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대전환 해야할 시기가 왔다.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의 64%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율은 단 8%에 불과해 해마다 엄청난 외화를 원목수입에 지출하는 형편이다.

이는 그동안의 육림정책이 나무심기 성과에만 치중했기 때문으로, 우리의 산은 숲은 우거졌으되 쓸만한 나무는 없는 산이 되고 만것이다.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고밀도로 고통받고있다. 30년생 나무 한그루가 자유롭게 자라는데 필요한 최소면적은 3평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1평당 1그루씩이 자라고 있다는게 산림청 조사결과다. 이는 동물들의 이동조차 불가능한 밀도인데다 공기조차 잘 통하지 않아 숲전체를 병들게 한다. 간벌과 가지치기등 '숲가꾸기'사업이 절실한 이유다.

산림못지않게 도시녹화도 중요하다. 뉴욕 센트럴 파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숲이 있는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새로 만들어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경우 녹지율을 60%로 까지 높여 설계하고있는 것은 멋진일이다. 반면 광주의 상무신도심은 녹지율이 15%에 불과하다. 오늘 61회 식목일을 맞아 광주시가 추진중인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광주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驛 신설 공약 남발, 호남고속철 누더기되나

5·31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야가 지키지도 못할 장밋빛 공약(空約)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각당 대표가 공약검증을 약속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을 맺은 것과는 정반대의 정치행태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책대결로 심판을 받겠다던 여야의 다짐 역시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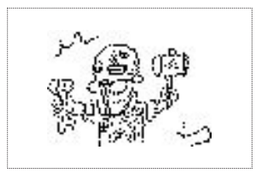
정치권의 대표적 생색내기는 호남고속철 중간 역 신설 공약이다. 열린우리당은 충청권과 전북지역 표를 의식해 공주역과 정읍역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오송역 확대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확보방안이나 타당성 여부는 관심 밖이다.

300㎞로 달리던 고속열차가 중간 역에 멈춰 섰다 출발하려면 감속→정지→가속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 10분이상이 지연된다고 한다. 공주와 정읍에 중간 정차할 경우 당초 목표인 서울→목포간 1시간 30분대 주파는 기대하기 힘들다. 호남고속철을 주로 이용하는 호남지역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간 역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조달도 막막하다. 역사(驛舍) 한 곳을 짓는데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철도공사 적자가 10조원이 넘는 판국에 국가재정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호남고속철은 아직 착공시기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더이상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지역민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완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부실 공약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든다. 불법 선거운동과는 달리 처벌도 불가능하다. 지역개발공약 남발은 부동산 거품만 부풀리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방선거가 소비성 재정증대의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無 等 鼓

과학기술 특수대



정부가 과학기술 특수부대 설치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관심이다. 이공계 출신의 과학기술 인력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전공분야를 국방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공계 출신 연구원들에게 군복무 면제와 기간단축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미 취업자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모두가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조선시대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사농공상(사농공상)이라 하여 관료사회를 우선시하고 기술을 천시하던 당시의 풍조가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람들의 의식변화, 취업난, 사회적 대우 등이 원인이다. 경제발전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단적 기준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개인적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대기업에 입사, 집단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이공계보다 개인이 창업하기 쉬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고시열풍이 불고 심지어 이공계 학생들마저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난과 전문성에 비한 낮은 임금도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워커가 이공계 채용포털 케이티잡과 함께 최근 이공계 직장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응답자의 65.7%가 '직무의 전문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25.6%), 육체적 고달픔(6.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다시 태어나도 기술직을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7.8%가 '아니다'고 답해, 기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개방시대, 기술경쟁력 확보야 말로 선진국 도약의 지름길이다. 과학기술 특수부대 설치도 좋지만 과학기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더욱 급선무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